

김관영 도지사, 도의회와의 갈등에 유감 표명 “소통 강화할 것” 약속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개선할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도의회와의 갈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정운영에 있어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점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조정 운영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와 의회 간 실무적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



안안을 인사청문회 협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9조38,579억원으로 확정해 지난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54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3996억원이 증가한 7조 8,404억원, 특별회계는 325억원 증가한 1조280억원을 편성했다. /김경수 기자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도본부 등 농민단체와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이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의 농민 생존과 농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농업 보호 대책 마련하라”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요청에도 반응 미온적”
도내 농민단체·오은미 도의원, 전북도에 촉구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도본부 등 농민단체와 오은미 도의원(순창 진보당)이 21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의 농민 생존과 농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내심이 한계상태에 이르렀다”며 “전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전라북도의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도 직불금 증액,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등 4가지 문제를 도에게 설명하고 15일까지 도청의 답을 요구했으나 전북도는 예산 부족 등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와 오은미 도의원은 “전라북도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전라북도의 즉각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할 것이다”며 “전북도와 지사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면 투쟁은 단순히 농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경수 기자

미리 알아보는 내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투자 방향

농식품부, 오늘 농진청 등과 온라인 합동 설명회
예산 총 1조147억 규모 예상... 달라지는 제도 안내
“농업 스마트화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보해 나가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2023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 설명회는 2023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연구자와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튜브 채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투자예산은 총 1조1,47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 2023년도에 달라지는 연구개발(R&D)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총 19개 사업에

21,02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식품 혁신성장과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체계 구축,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R&D)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2023년 총 47개 사업에 7,604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며,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미래농업의 혁신기술 증진, 농생명 기술·자원 개발, 농산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식량안보 및 신수요 창출 다각화, 지역농업과 국제농업기술협력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023년 총 19개 사업에 1,384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며,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산림생명지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화 촉진, 목재 자원의 가공 기술 고도화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23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개발사업에 388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외동물·동물제품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태복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농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농업 현장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군산공항 노선 확보 적극 대응해야”

김동구 도의원, “내달 15일 제주항공 군산-제주 노선 철수
도민 불편, 군산공항 활성화에 걸림돌... 철저히 점검해야”

도내 유일 공항인 군산공항의 노선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김동구 의원(군산 2·더불어민주당)이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15일,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한 지 2년 만에 군산공항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도민의 불편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며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34만2,994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며, 2020년부터 2년 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과 손실보전금으로 제주항공에 총 12억9,200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산공항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도민의 혈세로 항공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도민들의 항공 편익은 인종에도 없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양세워 철수를 결정한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행태에 도민들은 실망감에 이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민간 항공사는 오로지 수익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른다”며 “전라북도가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금 군산의 지역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제주 운항 감축은 어려운 군산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며 “도민의 항공 편익과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군산~제주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선의 본향 전북, 문화를 가장 발달시킨 곳”

박용근 도의원, 매년 7월 17일 ‘조선 건국의 날’ 지정 촉구
“태조 이성계와 관련 풍부한 스토리 보유... 관광자원화 해야”

전라북도의회 환경경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매년 7월 17일을 ‘조선 건국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지난 2019년도 실시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재조명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성계 관련 유적은 전국에 총 69건이 있으며 이 중 77%인 53건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만큼 전북은 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의 문화를 가장 발전시킨 것은 전북에서 그 역사와 문화를 기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며 “전라북도가 매년 7월 17일을 ‘조선건국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이 조선개국의 발흥지가 되었던 만큼 500년이 넘게 발전되어 온 조선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전북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 17일, 조선 건국 631주년을 맞아 조선건국의 날로 기념하는 것은 500년 조선문명을 전북이 계승해 나가는 첫 걸음이다”며 “전북은 조선개국의 시작이 되었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온 지역인만큼 전북이 조선문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 반드시”

김희수 도의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북 소멸 해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 필수”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이 21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북은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하위권을 전전하는 등 지방자치 사의 유례 없는



없는 지역으로 전락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와 국회는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화에 대한 지지와 공감의 목소리를 내왔으나, 정작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전라북도민이 겪어온 철저한 소외와 차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말 뿐인 공감이 아닌 관련 법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희수 의원은 영영선 의원과 ‘국회는 전북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설치 필수’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법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결의사항을 낭독했다. /김경수 기자

‘기회발전특구, 낙후지역으로 한정해야’

이명연 도의원, 현 정부 공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라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연 의원이 21일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미국의 기회특구제도에 착안하여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명연 의원은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있는 지 오래다”며, “특히 전북은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지역경쟁력 순위가 17개 광역단체 중 16위, 22년 3월 기준 14개 시·군 중 13



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여 전국 광역단체 중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토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 독점체제와 수도권 1극 중심의 행·재정적 제도를 꼽았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 공급정책을 인구집중으로 인한 불거진 투자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 저변에는 수도권 시대주의, 지방무시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시대역행적 정책이자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사회를 부추기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한 기회발전특구가 진정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 및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축소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준을 반드시 낙후지역으로 한정, 특구에 유례없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지원 촉구,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핵심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명연, 전용태, 강태창, 김명지, 김성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언이, 윤수봉, 임승식 의원의 의뢰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